

민주신당 본경선 관전포인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통과한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예비후보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 경선이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손학규 후보가 1위, 정동영 후보가 2위를 차지했으며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뒤를 이으며 컷오프를 통과, 본 경선에 진출했다.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2002년 투·개표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 이번을 속출하며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의 주말 정치드라마를 재연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도 친노-반노의 후보 구도가 짜이면서 상당한 흥행성이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다음달 15일까지 41일동안 진행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본 경선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신당 본경선 후보 5인 비교

	유시민	한명숙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출생	경북 경주	경상	경기 시흥	전북 순창	충남 청양
나이	48	63	60	54	55
학력	서울대 경제학 독일 마인츠구텐 베르크대	이화여대 여성학 과 대학원 석사	서울대정치학과, 영국 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사회학과
경력	개혁국민정당 대 표, 16·17대의원, 보건복지부장관	여성 단체연합회 공동대표, 16·17대 의원, 환경부장 관, 국무총리	인하대-서경대 교수, 14·15·16 대 의원, 경기도 지사	MBC 기자, 15· 16대 의원, 열린 우리당 당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13·14·15·16·17 대 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순서는 본경선 기호순

① 孫 ‘대세론’이나 鄭 ‘적자론’이나

예비경선 1·2위...여론조사 도입 놓고 정면 충돌

예비 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손 후보와 정 후보가 본 경선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손 후보는 '대세론'을 확산시키며 승기를 잡아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치적 '불모지'인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일류

넨 1위라는 상징성이 부동층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손 캠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정 후보는 '민주세력 적자론'으로 역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예비 경선에서의 격차가 근소했다는 점에서 역전

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출신의 손 후보는 본 경선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손학규 후보 측과 정동영 후보 측은 예비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본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② 친노후보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친노 후보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 및 흥행 포인트다. 친노 진영은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 손학규, 정동영 후보와 함께 3강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은 친노 후보군과 비노 후보군의 맞대결하는 대립 구도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서는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 맞서 친노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로 역전을 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일화 대상으로는 예비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이해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압도적 격차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한 후보가 4위를 차지하고 유시민 후보의 지지율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견 극복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도 친노 주자들과 비노 주자들의 격차가 확대된다면 결국 후보단일화 대세론에 물결 전망이다.

③ 탈락 후보들 누구와 연대하나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진로도 본 경선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합'을 외치며 민주당을 탈당한 후 예비경선에 뛰어든 주미애 후보는 대구 출신에 호남의 지지 기반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 본 경선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은 당장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정세성 등을 고려할 때 손학규 후보나 친노 후보보다는 정동영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정배 의원의 장외 주자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과는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는 이미 문국현 전 사장과 '정책 연대'를 통해 꾸준한 접촉을 한 바 있다. 신기남, 김두관 후보 등은 정치적 성향상 친노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노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제주도, 완도~ 제주 해저터널 건설 계획 공동 발표

사업비 18조·기술력 확보가 관전

대선공약 사업 포함 등 요구키로

5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추진계획을 공동 발표함으로써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제주도는 해저터널을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의 활력소와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여는 기폭제로 삼기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고도의 기술력 확보가 해저터널 건설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성장 프로젝트 =해저터널은 완도~보길도~추자도~제주도 구간 109km를 바닷속으로 잇는 대역사다.

전남도와 제주도는 해저터널이 만들어질 경우 국토 최남단과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도가 연결돼 양지역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전남의 J프로젝트와 이미 관광개발사업이 갖춰진 제주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해양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상악화 때마다 교통이 두절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해저터널 건설로 관광객 통행과 물류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와 기술력 이 관건=당초 해저터널 구상단계에서는 80km 구간에 모두 2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변밀한 검토 결과

거리는 109km에 사업비는 18조원으로 조정됐다. 전남도와 제주도는 자치단체가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저터널이 한반도 전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만큼 국비지원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도는 우선 내년엔 해저터널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50억 원을 국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당 사업을 대선공약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확보와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도 사업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해저터널 건설에는 바닷속에서 터널을 파들어가는 기본적인 방식 외에, 지상에서 콘크리

트 구조물을 만든 뒤 물을 채우면서 바다 밑에 가라앉혀 만드는 '침매(沈埋)터널', 바닷속에 다리를 띄우는 '수중교량' 공법이 동원된다.

완도~제주간 해저터널은 해양경관과 선박 운항 등을 고려해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완도~보길도 36km구간은 8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되고, 보길도~제주간 73km구간은 2개의 해저터널로 잇는다는 계획이다. 또 터널 구간은 도로 2차로와 철도 복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며 완공까지는 대략 7~8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해저터널은 1994년에 개통된 총 연장 50.45km의 유로 해저터널(영국-프랑스 도버해협, 해저구간 38km)을 비롯해 일본의 세이칸 해저터널 등이 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가 5일 제주도청에서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후 지도를 펼쳐 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국제회의 도시' 지정

문광부 심의 통과...컨벤션 도시 도약 기대

광주시가 사실상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서남권 제1의 컨벤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5일 "문화관광부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심의에서 시가 신청한 국제회의 도시 지정 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도시 지정 신청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고양, 대전 등이 신청했으나 광주만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

성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사항 점검과 관보 발표 등 사실상 행정절차만 남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청 때 탈락한 뒤 재도전해 성공했다. 국내 도시 중 국제회의도시에 선정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4군데 뿐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제회의의 전담조직인 컨벤션뷰로 출범과 관련조례 제정, 특급호텔 건립 추진 등 숙박시설 준비,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활발한 유치활동 등이 높

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국제 컨벤션 도시로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돼 '서남권의 컨벤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국제회의 도시 지정으로 내년 세계관광문화학술대회, 세계한상대회, 아시아컨벤션포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